

전쟁은 '불가피한 악', 발발 여지 줄이는 것이 대안

인류 평화를 위협해온 전쟁의 역사

이주천 |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인류는 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는가? 이것에 대해선 인간본능설, 정치구조설, 문명충돌설 등 세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지만 전쟁은 사실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돼 일어난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도 전쟁을 막지 못했다. 현재로선 전쟁을 '불가피한 악'으로 인정하고 발발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비행기 자살 테러사건은 수천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했고, 세계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1세기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 지 채 1년도 안됐는데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비행기 자살테러를 새로운 종류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이 테러를 저지르거나 이 조직을 비호한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한달이 지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폭격을 감행했고, 이어 특수부대를 투입해 탈레반 정권의 전복과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는 왜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역사에서 전쟁이 최초로 발생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본능설과 정치구조설, 문명충돌설 등이 있다.

전쟁 기원에 관한 세가지 학설

인간본능설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는 본래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 이를테면 할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는 인간의 잔혹성이 잘 묘사돼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카시우스 황제시절 로마 장군 막시우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에서 로마 민중들은 검투사가 된 막시우스 일당과 황제파 검투사들이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흥분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또 링에서 복서들이 사투를 벌일 때, 현대의 관중들은 이 싸움을 즐기면서 관전한다.



인류는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전쟁의 기원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검투사의 시합이나 개인적 싸움을 우리는 전쟁행위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란 인종·부족·민족·국가·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무력 투쟁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상호간, 특히 주권국가 상호간에 행해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을 말한다.

그 다음 인간이 권력욕이 강한 호모사피엔스임을 지적한 정치구조설은 인간이 물질, 권력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의 욕망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 커졌다. 실제로 인간사회는 가족단위에서 촌락으로, 다시 도시로, 국가로,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됐다. 전쟁을 치르는 전문적인 무장병력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됐고 전쟁은 이런 세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버드대 석좌교수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희재, 김영사)에서도 지적했듯 최근 많이 거론되는 문명 충돌설이 있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마주치게 될 때 서로 상대방의 생활방식, 가치관, 종교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명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의 십자군전쟁을 들 수 있다.

전쟁 막으려 한 역사적·제도적 실천 모두 실패해

역사에서 인간의 살인행위가 합법화, 정당화되는 때는 혁명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다. 평화시에 보통 인간들의 살인행위는 범법행위로서 국가에 의

해 처벌받지만,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군대는 적국의 군인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것은 전쟁이 국가간 분쟁의 최후 해결방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즉 합의를 도출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내린 판결은, 물론 어쩌다 정의가 우세를 펼친 적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정의보다 힘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인, 여자, 어린이 등 죄없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종교동란인 '30년 전쟁' (The Thirty Years' War, 1618~1648)의 경우가 그랬다. 그래서 전쟁의 법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왔고 국제법이 발전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H. 그로테우스가 쓴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은 전쟁행위에 관한 국제적 규칙을 정하고 있다.

전쟁은 문명의 발전속도와 비례해 발전을 거듭했다.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각국의 전쟁기술과 대량살상 무기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전쟁시 단기간에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커졌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1천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쟁은 문명의 발전속도와 비례해 발전

그렇다고 인류가 전쟁을 무한정 방치한 것은 아니다. 국제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국제연맹의 창설로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창설 시초부터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미 상원에서 국제연맹의 가입을 거부해 실제적 힘이 약화됐고 침략국을 응징할 때 무력제재의 마땅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불법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자는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레빈슨을 비롯한 전쟁 불법화 추진자들은 전쟁이 국제관계에서 명예로운 제도로 인식되는 한 전쟁이라는 악의 뿌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문제 해결방법은 국제법으로 전쟁을 부인해 그 법적 특권을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적대행위를 시작한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축출해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은 프랑스의 외무장관 A. 브리앙과 미국의 국무장관 F. B. 켈로그였다. 1927년 브리앙은 전쟁 불법화 주창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에 양국간 조약 체결을 제의했다. 이 제안이 발전해 1928년 6월 23일 미국이 초안한 다국간 조약은 14개국의 찬성을 거쳐 같은 해 8월 27일에 파리에서 조인됐다. 63개국이 비준한 이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은 '부전(不戰)조약'이라고도 불린다.

그렇지만 이 부전조약도 11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차대전의 종결 후,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재편됐고,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이 갖지 못했던 무력제재 수단인

군대를 포함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출범했지만,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됐는데, 가공할 핵무기와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미사일 병기, 미생물을 이용한 생화학 전쟁무기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류는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의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 전선이 불확실한 전쟁, 비행기 자살공격과 탄저균 살포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듯 무기사용에서 반인륜적 무절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 없는 평화는 유토피아적 동상일 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장차 종식될 거라 믿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전쟁이 평화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천년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26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류는 정녕 지구상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중세는 개인끼리의 분쟁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결투를 수백년 동안 허용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교회와 국가가 나서자 관습적으로 인정했던 결투는 중단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개인보다 강력한 정치세력인 교회와 국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보다 더 강한 집단적 안보세력이 일개 국가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전쟁이 계속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국제연맹의 창설은 2차대전을 막지 못했고, 국제연합의 창설도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결국 현재의 잠정적 결론은 전쟁이 인류사회에서 '불가피한 악'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전쟁 발발의 여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평화주의자들이 전쟁반대를 외쳐도,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외교협상의 능력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

이주천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고려대 사학과에서 '미국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미국 현대 외교사》 《무즈벨트의 친소정책》, 역서로 《미국인의 전쟁방식》, 논문으로 《6.25전쟁이 남북한에 미친 영향》 《태평양전쟁과 전략》 등이 있다.